

코스피	2628.62	코스닥	853.26
	(-47.13)		(-8.97)
금리	3.543	환율	1375.00
	(+0.034)		(+5.80)

정의선 회장
인도 재방문
“특화 전기차 개발”
02



m-커버스토리

개와 늑대의 시간. 밤과 낮이 교차할 무렵, 내 앞에 나타난 짐승이 나와 함께할 것인지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리인하 시기는 미뤄진 상태다. 우리경제도 ‘개’ (경제회복)인지 ‘늑대’ (경제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美 금리 파도에 세계경제 휘청 금융불균형 완화... 위기 넘어야

떨어진 美 금리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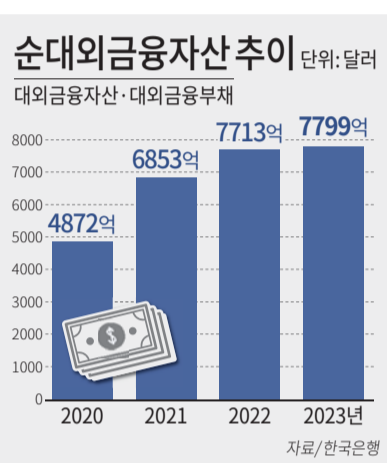
美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확신 없어
기준금리 인하, 오래 걸릴 수도”

금리 인상, 달러가치 상승하면
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위기’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현 5.25~5.50%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개와 늑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되살아나는 ‘IMF위기’ 트라우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보낸 이후 매년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 2022년 가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



린 시기마다 대체로 몇 년 뒤 아시아의 외환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등이 터졌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닥친다면 진원지는 다시 미국 연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블랙홀 처럼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첫번째 시기(1996년 6월~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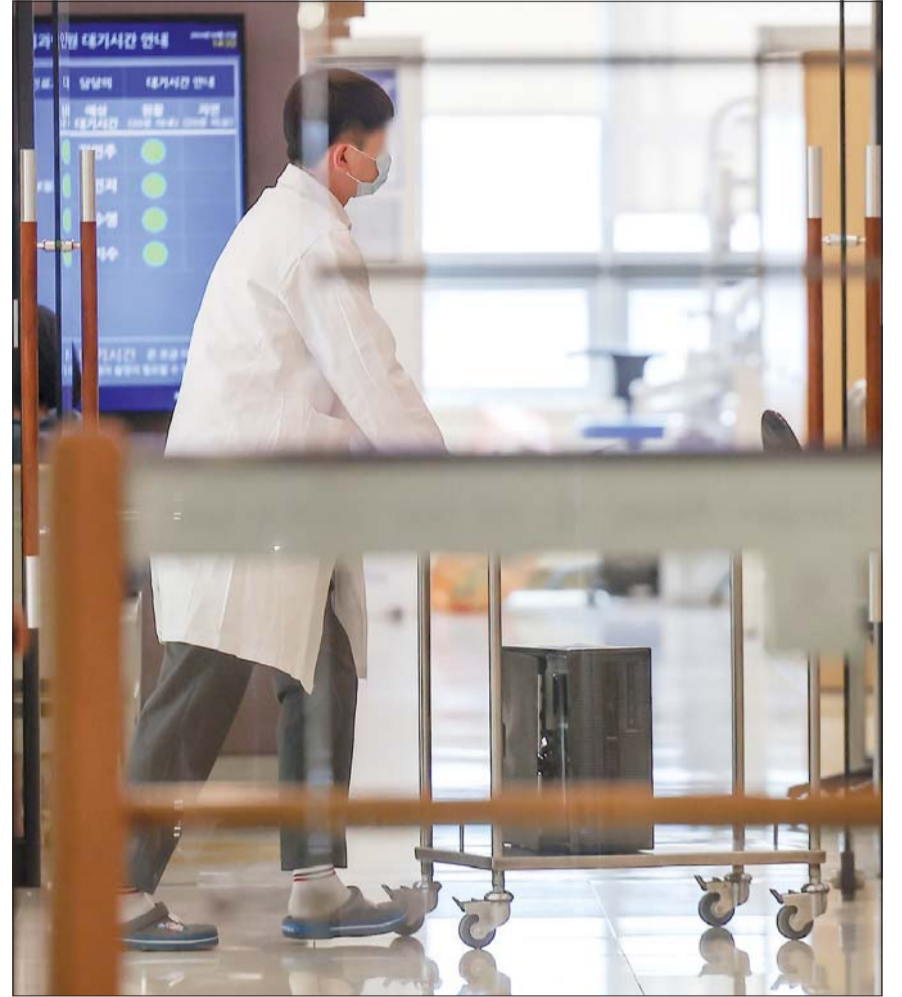
5월)의 끝자락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두번째 인상(2004년 6월~2006년 6월)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과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 국가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 확대와 통화절하를 막기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소비위축 등으로 실물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의대 교수들 사직 시작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헌재 “유류분 제도는 위헌”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없어
유류분권 부여 이유 찾기 어려워
기준 조항 유지, 내년 말일 입법”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규춘 기자 ch9720@

巨野 민주당, 22대 국회서도 ‘강성팬덤’ 휘둘리나

비·친 이재명계 구분 도구로 활용
강성 지지층, 행동반경 점점 넓혀
의원·당선인들도 강성팬덤 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며 범야권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들이 일부 강성 팬덤에 휘둘러 대립을 일삼는 ‘정쟁’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정치에 특성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추종하는 이른바 ‘강성 팬덤’은 여야 주요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일종의 팬덤의 수혜를 입은 정치인인데, 최근에는 팬

덤(팬) 양아들(양심의아들) 등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 등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서슴없이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표시를 하는 등 행동 반경을 넓혔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팬덤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제도적으로도 당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앞둔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팬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장 출마자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말도 한층 더 거세졌다.

<2면에 계속> /백태홍 기자 pth7285@

덤이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가로 막거나, 내부 이견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 지 오래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후, 강성팬덤은 비이재명계를 친이재명계와 구분짓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른바 개발(개혁의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輿론회서 손소리 분출...“사람들 죽겠다는데 수출 잘된다 얘기만” /사진 뉴스1
▲대통령실 “경제성장률 예상 2.2% 넘을 듯”

▲박주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추후 제 역할 고민”
▲우원식, 국회의장 도전 선언...“중립협소함 넘어설 것...판단·민심 우선”



▲한-호주, 내달 1일 외교·국방 장관회의...인태전략·방산 논의
▲한총리, 中 라오닝성 당서기에 중어선 불법조업 관심 당부 /사진 뉴스1